

등록금 · 물가는 인상

임금은 억제?

이명박은 서민 등골 뽑기를 멈춰라



중국 정부는
티베트 학살 중단하라

중국의 압제에 맞선 티베트의 저항

- 티베트 망명정부

동아시아 대사 인터뷰
4~5면



88만 원 세대의 분노와 저항

- 등록금 투쟁의 요구와 과제

- 인터뷰 : 88만 원 세대와 알바

6~7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심각해지는 미국의 이란 위협

8면

마침내 승리한 고려대 출교 철회 투쟁

12면

세계경제 위기와 이명박의 '서민지옥' 정책

5면



'대운하 반대 서울대 교수 모임' 김정욱 공동대표 인터뷰

9면

미국 '2007년 인권보고서'의 위선과 진실

3면

이명박의 '개판 공천'과 민주당 공천 개혁의 허구

3면

<맞불>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www.counterfire.or.kr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인용해도 될까요?”

““대공황 이후 최악의 위기’라 일컬을 만하다. 종말론적으로 들리겠지만 이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들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다.”

— 헤지펀드 ECU 그룹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닐 맥키는

“형님 튜세요.”

— 청와대 민정수석 이종찬이 검찰 재직 당시 삼성 부회장 이학수에게 전화해서 해 준 말

“[학교 평균을 위해] 운동부와 특수학급 학생들은 시험을 봤다 하더라도 재적수에서 빼 주시고, 답안지도 걷은 후 알아서 폐기 부탁드려요.”

— 일제고사 때 경기도 한 학교의 지침

“[학원 교습시간을] 몇 시까지 해라 하는 등의 규제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과연 필요할까 ... 성인들이 일을 하다 과로해서 죽었다는 말은 있어도 학생들이 공부하다 피곤해서 죽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

—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 정연희

“강패들은 오자마자 우리를 걷어찼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축구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 억울하고 가슴 아프게 사는 노동자들이 모두 저처럼 얻어맞고 결국 정신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하니 비참했습니다.”

—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

“당신과 저는 매우 슬픔니다. ... 당신은 가정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고 한 여성의 삶에 얼마나 큰 일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 내가 한국에 왔을 때 대화할 사람이 당신뿐이었는데 ... 당신은 이 글 또한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해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 남편에게 맞아 죽은 베트남 신부가 남긴 마지막 편지

재벌들의 “머슴” 이명박 정부가 노동자를 걷어차고 있다

전지운

요즘 노동자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라면과 자장면 가격까지 올랐을 뿐 아니라 1천 원짜리 김밥마저 사라지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있다.

기업주들의 “머슴”이 되려는 이명박 정부의 노동부장관 이영희는 욕실에 35만 원짜리 비눗갑이 있는 고급 빌라에서 살며 경총 자문위원을 했던 자다.

경총은 지난해 발간한 <비정규직 인력관리 체크포인트>에서 비정규직의 피를 빨아먹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올해 증보판에서도 “[분리] 직군제도를 ... [차별시정] 비교대상 자체를 없애는 방법으로 활용”하라고 제시했다.

그리고 이영희의 노동부는 이런 경총의 “머슴”답게 각종 노동개악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용기간의 제한 없이 멋대로 비정규직으로 쓸 수 있는 연령을 현행 55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낮추려 한다. 기간제 고용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파견제 허용 업무도 더 늘리겠다고 밝혔



3월 11일 코스콤 등 비정규직 농성장들에 동시다발적 침탈이 벌어졌다

다. “파트타임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도 했는데, 멋대로 부러먹다가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비정규직을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또, 탄력 근로시간제 적용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려 한다. 그러면 기업주가 멋대로 노동시간을 조절하고 할증 임금 지급도 피할 수 있다. 임금 삭감을 낚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멋대로 해고하고 돈으로 보상하면 그만인 부당해고 금전보상제도 확대하려 한다.

반면, 노동부가 나서서 “임금인상 자제 행정지도”를 할 것이

며, “불법 집회와 정치 파업을 엄단”하겠단다.

노동부가 이명박에게 보고한 이런 정책들은 ‘정책 연대’를 약속한 한국노총과도 논의되지 않은 것이다. 이명박은 이에 대해 “실용적으로 잘 작성됐다”고 거듭 칭찬했다.

얼마 전 코스콤 비정규직 농성장을 폭력 철거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가 고용한 용역깡패들은 노동자들을 “축구공[처벌] ... 걷어찼다.” 이명박 정부의 노동자 걷어차기 패악질을 막아야 한다.

경총의 터무니없는 임금 인상 자제 요구

얼마 전 경총은 물가인상률에 턱없이 못 미치는 2.6퍼센트의 임금인상률을 제시했다.

경총은 인건비 인상이 물가 인상을 낚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재의 물가 급등은 원자재·곡물·원유 가격 인상에서 비롯한 것이다.

게다가 임금 인상이 반드시 물가 인상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5인 이상 작업장의 실질임금 인상률은 2004년에 6퍼센트, 2005년에 7.5퍼센트였던 반면, 소비자물가 인상률은 2004년 3.5퍼센트에

서 2005년 2.7퍼센트로 하락했다.

또, 경총은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임금 안정”이 필요하다며 마치 임금 인상이 실업의 원인인 것처럼 주장한다. 그러나 임금인상률이 높았던 1987년 호황기에 실업률은 매우 낮았다.

비난의 화살

정부와 사장들은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자제하면 그 돈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저들은 임금 인상 자제에 이

어 더 열악한 노동조건과 정리해고의 칼날을 들이밀곤 했다. 게다가 노동자들의 지불 능력이 줄면 경제가 더 악화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경총이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동결을 강조하는 이유는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려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요구를 자제해야 할 이유는 털끝만큼도 없다. 민주노총의 임금 인상 요구는 매우 정당하다.

김은영

환자 생명 놓고 판돈 거는 다국적 제약회사

다국적 제약회사 BMS가 백혈병 치료제 ‘스프라이셀’ 한 알에 6만 9천1백 35원이라는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요구하고 있다. 일명 ‘슈퍼 글리벡’이라고 불리는 스프라이셀은 항암제 글리벡 복용 후 내성이 생긴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치료제다.

BMS의 요구가 실현되면 매일 약을 먹어야 하는 환자들은 한 달에 4백만 원, 일 년에 5천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BMS는 스프라이셀 가격 산정 근거로 글리벡 가격을 들었다. 그러나 글리벡 가격은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가 선진 7개국(미국·영국·프랑스·일본·이탈리아·스위스·독일) 약값을 적용해 돈 없는 환자들의 숨통을 조여왔음을 보여 주는 사례일 뿐이다.

이런 다국적 제약회사의 횡포 때문에 매년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5~20퍼센트씩 급증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에 한몫하고 있는 것이다.

숨통

BMS와 정부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이번 협상을 통해 정부가 한미 FTA 협상에서 다국적 제약회사의 압력에 맞서 지켜냈다고 선전한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허점이 드러났다.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약가재평가’는 여전히 선진 7개국 약값을 적용하고 있고, 글리벡 같은 고가의약품의 가격을 내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국적 제약회사는 의약품의 가격과 공급을 마음대로 결정하면서 환자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 예컨대 에이즈 내성 치료제인 ‘푸제온’은 약값이 낮다는 이유로 3년째 판매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다국적 제약회사의 독점적 지위를 약화시키기는커녕 제약회사의 특허권을 강화하는 한미 FTA를 추진하고 있다.

다국적 제약회사의 횡포로 죽어 가는 전 세계 환자들의 생명이 너무 절박하다. 다국적 제약회사는 환자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횡포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정부의 의료시장화 정책도 당장 중단돼야 한다.

이미진

사법 테러로 덮인 ‘석궁 사건’의 진실

이광열
구속노동자후원회 사무국장

3월 14일 이른바 ‘석궁 사건’으로 구속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실형 4년을 선고했다. 언론에 의해 부풀려지고 왜곡된 이 사건은 ‘무전유죄’ 판결에 분루를 삼켜야 했던 수많은 ‘사법 피해자’들에게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 줬지

만, 사법부는 김명호 교수를 ‘응징’함으로써 위선적인 권위를 세우려 했다.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전국의 수석 부장판사들이 회의를 열고 이 사건을 “사법부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고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힌 것만 봐도 그들의 속내를 알 수 있다.

김명호 교수를 변호했던 박훈 변호사는 “무엇 하나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법률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는 사법부에 의한 “재판 테러”에 분노를 표했다.

이 사건에 사용된 “화살촉 끝이 뭉툭하고 뒷부분이 부러진” 화살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박홍우의 옷에 묻은 혈흔을 감청해 보자는 피고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 신태길은 재판 내용을 녹음·녹취하지 않았고, 속기록

도 공개하지 않았다. 김명호 교수는 3월 11일, 참다못해 법정에서 퇴장했고 선고 때도 출석을 거부했다. 선고가 있던 날, 분노한 방청객들은 판사들을 향해 계란 세례를 퍼부었다.

김명호 교수뿐 아니라 수많은 구속노동자와 양심수들도 “개그 콘서트만도 못한”(박훈 변호사) 이런 재판들에 의해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 이명박 시대에 이들의 감옥살이는 더 힘겨워지고 있다.

최근 안동교도소는 교도관의 ‘재소자 구타 사건’을 은폐하면서 이를 폭로하려 했던 전국철거민

연합 정창윤 동지에게 금지[징벌]방에 가두는 것] 10일을 내렸다. 영등포구지소는 밥에서 걸레 조각이 나온 것에 항의한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연제일 동지에게 ‘교도관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3백50만 원을 청구했다.

포항교도소는 서신을 잘 전달해 주지 않고 하루 1시간의 운동마저 종종 생략한다. 그래서 오십이 넘는 포항건설노조 심진보 동지는 또다시 단식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가진 자들을 위한 ‘법과 질서’에 맞선 투쟁만이 자유로운 세상을 앞당길 수 있다.

벌써 엔진이 덜덜거리는 이명박 불도저

전지운

이명박은 최근 “새 정부가 탄생한 지 20일이 됐는데, 한 6개월쯤 된 것 같다”고 푸념했다. 이명박 20일이 6개월처럼 느껴지는 것은 짧은 기간에 압축적으로 쏟아낸 개악과 반동, 추문들 때문이다.

이명박의 친기업·반민중적 개악과 공격들은 그야말로 휴일도 없는 ‘노 홀리데이’였다. 이명박은 “공직자는 국민의 머슴”이고 “주인보다 일찍 일어나야 한다”고 했는데, 재벌들의 “머슴” 이명박의 부지런함은 노동자·서민들에게 큰 괴로움을 줬다.

서울시의회가 “공부하다 죽은 학생 봤냐”며 학원 24시간 영업을 추진한 것도 이명박의 부지런함을 흉내낸 결과였다. 성남에서 “저를 낭떠러지로 밀지 말아주세요. 살고 싶습니다” 하는 떡볶이 노점상을 분신으로 내몬 것도 정부의 ‘부지런한’ 단속이었다.

물가 인상 속에 아이들에게 자장면 사주기도 부담스러워진 서민들에게 이명박이 선물한 것은 1인당 주택 3.6채와 토지 4건을 가진 ‘강부자’ 내각이었다.

평균 재산 39억 원인 ‘강부자’ 내각은 4일에 한 명씩 노동자를 구속했고, 코스콤 비정규직 농성장을 폭력 침탈했고, 이



속출하는 이명박 불도저의 희생자들 - 노점상 단속에 항의해 분신한 떡볶이 노점상

제 ‘백골단’을 부활시키려 한다. 반면 삼성특검은 ‘삼성을 특별히 봐주는 검사’가 됐다. 덕분에 삼성은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라고 한다.

그 결과 지금 이명박의 지지율은 일부 조사에서 심지어 40퍼센트 이하까지 떨어졌다. 반면 민주당은 반사이익을 누리며 박재승의 ‘공천 혁명’ 속에 부활하고 있다. 한나라당 총선 압승 전망은 옛 얘기

가 됐다.

이명박 정부가 요즘 ‘좌파 적출론’을 들먹이는 건 이런 상황 때문일 것이다. “지난 10년간 국정을 파탄한 [좌파] 세력이 각계 요직에 남아 새 정부 출범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은 이라크 파병과 한미FTA 등 노무현의 정책을 그대로 인수했고 김성호, 김장수 등 노무현 밑에서 노동자 탄압, 이라크 파병 등

을 주도했던 자들까지 인수했다. 이명박의 ‘좌파 적출론’은 정치 위기를 돌파하며 반동과 개악을 계속하기 위한 술수다.

이명박은 또 박재승 ‘공천 혁명’에 대응해 소위 ‘영남 학살 공천’을 단행했다. 그러나 영남에서 친박근혜 부패 우익이 빠져나간 자리를 메운 것은 친이명박 부패 우익들이다. 한나라당의 공천은 이명박 친형 이상득 주도로 뉴라이트와 정치철새·재벌 총수 등을 공천한 ‘형님 공천’, ‘철새 공천’, ‘재벌 공천’이었을 뿐이다.

한편, 민주당의 ‘공천 혁명’도 허구다. 민주당 공천에서 일부 부정·비리 전력자는 배제됐을지 모르지만, 개악·배신 전력자는 전혀 걸러지지 않았다. 정동영, 강봉균, 친노파 386 등 이라크 파병, 노동법 개악, 한미FTA 추진 등을 주도한 개혁사기꾼들은 고스란히 남아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여전히 이명박 불도저의 브레이크가 아니다.

이명박 불도저의 앞길은 어둡기만 하다. 불길한 총선 전망과 더불어 이명박은 “어쩌면 세계경제 위기가 시작된다는 생각도 든다”며 걱정했다. 벌써부터 “6개월쯤 된 것 같다”는 이명박 불도저의 엔진을 하루빨리 꺼뜨릴 수 있도록 강력한 저항을 건설해 나가자.

미국 ‘2007년도 인권보고서’

물고문 국가의 위선적 기록

김하영

지난 3월 11일 미국 국무부가 ‘2007년도 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이 해마다 발표하는 이 보고서는 이데올로기의 성격이 짙다 — 민주주의의 수호자 미국이 독재 국가를 심판한다는 이데올로기.

필요하다면 독재자들을 응징할 수 있다. ‘민주주의 확산’은 지난 20여 년 동안 미국이 자행한 군사 개입을 정당화하는 논리였다. 부시는 이라크 전쟁이 ‘제2의 히틀러’인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히려 이라크는 미국의 개입이 민주주의를 전파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다. 독재자 후세인은 제거됐지만, 그 자리를 미국 점령 당국이 대체했을 뿐이다. 아부그라이브 감옥의 고문과 이라크인 1백만 명 학살 이라크인들은 민주화가 아니라 생지옥을 경험하고 있다. 이란·시리아와 함께 “최악의 인권위반국”으로 꼽힌 북한이 반발하는 이유다.

미국의 “인권보고서”에는 미국편이 없지만, 미국은 최악의 인권위반국 중 하나다. 미국 국무부가 “인권보고서”를 발표하기 사흘 전, 미국 대통령 부시가 물고문 등을 금지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만 봐도 이 점이 분명하다. 부시는 이 법안이 “테러와의 전쟁에서 가장 유익한 수단을 없애

려는 것”이라며 진정한 독재자 면모를 과시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고문을 자행하는 비밀 구금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세계적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위치의 보고서를 보면, 그 중 하나인 관타나모 수용소에는 기소도 되지 않은 2백75명이 갇혀 지금도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http://www.hrw.org/)

백골단

인권유린은 미국 국경 밖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다. 지난해 미국 의회는 테러범이라는 의혹만으로 미국 시민을 도청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켰다. 2007년 현재 미국의 재소자 수는 2백20만 명인데, 인구수에 비해 세계 최고 수준인 이 수치는 30년 전보다 무려 5백 퍼센트나 증가한 것이다. 또, 흑인이 수감될 확률은 백인보다 6배 이상 많다.

위선적이기는 이명박 정부와 우파 언론들도 뒤지지 않는다. 조중동은 미국의 “인권보고서”를 인용하며 북한 비판에 열을 올린다.

그러나 이들은 미국의 “인권보고서”가 다룬 남한의 국가보안법 문제 등 인권 침해 현실에 대해서는 입을 꼭 다문다. 이 보고서는 전교조 교사와 사진작가(이시우 씨) 사례를 들며 국가보안법에 대한 유엔인권

지난해 11월 15일 미국에서 열린 물고문 반대 시위

위원회의 소견을 인용했다. “국가보안법은 국제 규약에 따른 민권과 정치적 권리의 완전한 실현에 주요 장애물이다.”

이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9월 현재 정치적 신념을 이유로 82명을 기소했다”는 민가협 보고도 인용했다. 또, 여러 언론이 보도한 여성·장애인·소수자 문제 말고도, 노동권 제약, 광범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문제, 양심적 병역거부 불인정 문제도 지적했다. 한미FTA 반대 집회를 취재하던 기자들이 경찰에게 두들겨 맞았다는 사실도 인용하고 있다.

얼마 전 경찰청이 체포전담반을 신설하겠다고 밝혀 ‘백골단’의 부활을 예고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이명박 정부의 인권 기록은 더욱 형편없어질 것이다. 제 나라 국민의 민주주의를 제약할 궁리만 하는 자들이 북한 인권을 거론하는 것은 정말이지 역겨운 위선이다.

진보진영 일각의 우려스런 입장

미국의 비난 대상인 중국이나 북한은 미국의 “이중잣대”를 날카롭게 비난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사람을 근본으로 하는 집정 이념을 견지하고 있으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측면에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성과를 달성했다”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주장은 또 다른 거짓말일 뿐이다. 지금 티베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살을 보라.

북한에 심각한 인권 유린이 존재한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북한에서는 언론 자유, 노동권, 이주 자유 등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북한 당국도 공개처형과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인정한 바 있다.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마치 북한에 인권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한다. “미국이 북의 인권 침해 사례라고 제시한 것들은 정체 불명의 조작된 사진이나 돈 몇 푼에 거짓말을 일삼는 탈북자들의 증언뿐”(한국진보연대)이라며 말한다.

그러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정부의 위선에 동조하거나, 아니면 미국 정부의 위선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을 두둔하는 두 나쁜 선택만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인권을 빌미로 제국주의적 군사 개입을 정당화하려는 미국과 남한 정부에 일관되게 반대하면서도, 북한 민중 스스로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기를 바라야 한다.

“국내 저항이 일어나기까지는 외세 개입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정하고 실질적인 민주적 변화를 쟁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존 리즈의 《새로운 제국주의와 저항》)이기 때문이다.

티베트 시위 참가자들이 중국군 트럭에 돌을 던지고 있다

티베트인들이 억압에 맞서 투쟁하다

찰리 호어
영국 사회주의자,
《천안문으로 가는 길》의 저자

티베트에서 20년 만에 최대 규모의 항쟁이 발생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거리에서 경찰과 전투를 벌였다. 중국 지배자들은 티베트자치구를 봉쇄해 언론들이 상황을 보도하지 못하도록 한 뒤 잔인한 탄압을 시작했다.

이번 주 티베트에서 발생한 소요와 시위는 수십 년에 걸친 민족억압의 산물이다.

지난주 초, 티베트 수도 라싸에 있는 주요 사원들의 승려들은 1959년 항쟁을 기념하기 위한 평화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수천 명의 무장 경찰이 시위 참가자들을 공격했고, 이윽고 경찰이 발포하기 시작하자 시위가 급진화하기 시작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투석전을 벌이고 쇠파이프를 들었다. 한쪽 소유의 상점들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지난 주말에 시위 참가자들은 라싸 중심가를 점거했다. 티베트 망명자들은 중국 경찰의 발포로 최소한 80여 명이 죽었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는 라싸에 많은 군대와 장갑차를 파견했다.

티베트 제2의 도시인 시가체와 간쑤성(省)에서도 비폭력 시위가 일어났다.

티베트 망명자들의 웹사이트들은 티베트와 인접한 칭하이성과 쓰촨성에서도 시위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간쑤, 칭하이, 쓰촨은 '역사적으로' 티베트의 일부였고 티베트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런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것은 1989년 3월이었다. 당시 승려들이 이끈 시위대는 극심한 탄압을 받았다. 시위대는 3일 동안 라싸 중심가를 점거했는데 중국군과 경찰의 공격을 받아 수백 명이 사망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시위의 규모는 1989년보다 더 큰 것 같다. 그러나 이를 조직한 단일한 조직이 존재하는 것 같지는 않다. 1959년 항쟁 기념일이 티베트 민족주의 정서가 결집하는 초점 구실을 한 것이다.

간략한 역사

1953년 이전에 티베트는 달라이 라마가 통치하는 왕정 국가였다. 매우 가난하

고 불평등한 국가였고, 인구 다수가 대지주에게 예속된 농노였다.

1953년에 중국군이 침략했고, 중국군은 처음에는 달라이 라마와 지주들과 협력적 관계를 맺었다. 그러나 중국군이 티베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자 티베트인들의 저항이 시작됐다.

저항은 1959년 3월 항쟁 때 절정에 달했다. 중국군은 티베트인들을 공격했고, 달라이 라마를 포함해 티베트인들 5만 명이 인도로 망명했다.

중국 정부는 티베트에서 식민 통치를 시작했다. 중국 정부가 [티베트] 전통 작물의 재배를 금지하고 티베트의 기후와 맞지 않는 곡류 재배를 강제하면서 1960년대 초반 기근이 광범하게 발생했다.

얼마 뒤 문화혁명 동안 많은 수의 티베트 문화·종교 유적들이 파괴됐다. 전통 복장을 입은 사람들이 공격당하기도 했다.

1976년 마오쩌둥 사망 이후 억압적 분위기가 다소 완화됐다. 중국 경제가 고도 성장하면서 티베트 관광붐이 일어났다. 지난해 처음으로 티베트와 중국 사이에 직통 열차가 개통되기도 했다.

그러나 티베트인 대다수는 이런 경제 성장에서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한족과 다른 소수민족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독점했다. 이것은 최근 소요에서 한족과 다른 소수민족들이 공격당한 이유 중 하나다.

중국 정부는 농촌 지역에서 대규모 이주를 진행했다. 지난해 티베트인들의 10퍼

센트가 강제로 거주지를 옮겨야 했다.

비록 새로운 거주지의 주택이 이전 것보다 나은 것은 사실이지만, 티베트인들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티베트인들이 자기 경작지를 떠나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는 신세가 됐다.

올림픽

이번 소요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최악의 시점에서 벌어졌다. 올 8월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6월에 올림픽 성화가 라싸를 통과할 예정이다.

중국 지배자들은 올림픽을 통해 중국이 세계적 열광임을 뽐내고 싶어한다. 그래서 중국의 고도성장 뒤에 감춰진 어두운 진실을 감추고 싶어 한다.

중국 지배자들은 대규모 군대의 보호 아래 성화를 이동시키거나, 더 많은 독립 요구 시위들이 발생하도록 허용하는 것 사이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단기적으로 보면, 중국 정부는 무력을 사용해 라싸의 시위를 진압할 수 있다. 당연히 언론들이 탄압을 보도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소요는 티베트 독립 운동의 사기를 크게 높였고 중국 정부의 티베트 점령을 점점으로 부각시켰다.

12년 만의 최악의 물가인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국 지배자들은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한 것이다.

주간 <맞불>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 6개월 / 2만 5천 원 (신문값 2만 원 + 우송료 5천 원)
☐ 1년 / 5만 원 (신문값 4만 원 + 우송료 1만 원)

www.counterfire.or.kr / reader@counterfire.or.kr / 전화 : 02-2271-2395
계좌 번호 : 국민은행 048402-04-014849(예금주 : 백은진)



‘다함께’에
가입
하십시오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이란 공격에 반대하십니까? ☐
비정규직화와 한미FTA에 반대하십니까? ☐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
성, 성 지향, 인종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십니까? ☐
토론하고 논쟁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활동가들의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표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함께'에 가입하십시오.
전쟁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해 함께 투쟁합시다.

다함께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 계좌 : 국민은행 694701-01-227958(예금주 : 백은진)

“중국 정부는 티베트인들을 60년 동안 유린했습니다”

한족이 운영하는 상점이나 한족이 소유한 자동차를 공격했던 것입니다. 중국 군대는 더 많은 살육을 저지르는 것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왜 티베트인들은 한족 사람들을 공격했을까요? 중국 정부는 지난 60년 동안 티베트인들의 인권을 철저히 유린했습니다. 티베트인들은 일상적으로 모욕을 당하면서 분노를 쌓아 왔던 것입니다.

지금 그 분노가 폭발한 것은 중국 정부가 주장하듯이 티베트 망명정부나 달라이 라마가 뒤에서 조종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중국 정부가 티베트를 계속 군사 점령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국 정부는 1951년에 강제로 티베트를 합병했습니다. 당시 중국 공산당 정부는 티베트 정부와 이튼바 ‘17조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사실 강요한 것이었죠. 17가지 조항 모두 중국 정부가 작성했고 티베트 측에는 서명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중국어로 티베트의 명칭은 시짱[西藏: 서장]입니다. ‘서쪽의 보물’이란 뜻이죠. 어떤 의미에서 보물일까요? 먼저, 티베트에는 천연자원이 많이 매장돼 있습니다. 60가지나 됩니다. 수자원이 풍부합니다. 또, 군사 전략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중국 정부는 현재 내륙의 물 부

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티베트의 수자원을 사용하려 합니다. 오늘날 석유 때문에 이라크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래에는 물자원을 둘러싸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티베트는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티베트의 강은 인도, 중국, 버마, 방글라데시, 러시아로 연결됩니다.

중국 정부는 티베트를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분명히 개발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평범한 티베트인들이 이 개발에서 이득을 얻고 있습니까? 중국 정부는 자신의 군사적·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티베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새로 개통된 철로는 유사시에 중국군이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또, 티베트의 천연자원을 외부로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입니다. 티베트의 천연자원이 상하이의 경제 발전을 돕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철로의 건설 과정에서 티베트의 환경이 파괴됐습니다.

오늘날 티베트자치구에는 티베트인들보다 한족이 더 많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티베트인들의 거주 지역은 티베트자치구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그러나 자치지역 내에 한족이 더 많은 것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에서조차 소수민족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정리 김용욱

3월 16일 방한한 티베트 망명정부 동아시아 대표부 사무소 락빠 초고 대표를 긴급 인터뷰해 티베트 민중 저항의 배경에 대해 들었다.

이번 항쟁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번 사태는 오랜 과정의 결과입니다. 물론 직접적인 원인은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평화적인 행진에 폭력을 휘둘렀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중국군이 티베트인들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는 동안 후진타오는 제17차 전인대 기조 연설에서 ‘민주주의’란 단어를 40~50번이나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티베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중국 군대가 평화로운 시위 참가자들을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티베트인들이 분노했고, 그 분노의 표시로

티베트인들의 투쟁에 지지를

김용욱

중국의 점령에 맞선 티베트인들의 투쟁은 중국이 사회주의는 커녕 제국주의 열강의 하나임을 분명히 드러냈다.

이번 시위에서 티베트인들은 달라이 라마의 사진과 함께 ‘티베트 독립’ 구호를 내걸었다. 피억압 민족으로서 티베트인들은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민족자결권을 가져야 한다.

안타깝게도 달라이 라마와 티베트 망명 정부는 1980년대 초부터 티베트 독립 국가 건설을 포기하고, 중국 정부와 협상해 ‘진정한 자치권’을 얻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 소심한 요구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의 우월한 군사력을 고려할 때 티베트 독립은 쉬운 일



3월 18일 티베트 출신 이주자들과 36개 국내 시민사회단체 회원들 60여 명이 중국 대사관 앞에서 중국 정부의 학살에 항의하고 있다

이 아니다. 따라서 티베트의 민족 해방 운동은 중국 노동자·농민의 투쟁과 결합해야 한다. 현대 중국의 역사에서 소수민족의 자결권 문제가 최초로 진지하게 제기됐던 것도 1920년대 중국 혁명기였다.

중국 정부는 티베트인들의 투쟁으로 1989년 톈안먼 항쟁의

‘망령’이 되살아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 물가양동에 따른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투쟁과 부패한 지방 관리들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이 거대한 투쟁으로 확산될까 봐 우려하는 것이다. 이런 대규모 투쟁이 벌어진다면 티베트 등 소수민족 해방 운동에 훨씬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것이다.

세계경제 위기와 이명박의 ‘서민 지옥’ 정책

강동훈

이번 주 초 미국 5대 투자은행 가운데 하나인 베어스턴스가 파산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큰 충격에 빠졌다.

주요 투자은행들 중 모기지 채권에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를 했던 베어스턴스는 모기지 부채 위기가 나타나자 누구로부터도 자금을 빌리기 어려웠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1930년대 대공황 때 제정된 후 한 번도 발동한 적이 없던 긴급 자금 지원 방안까지 써 가며 지원했지만, 베어스턴스의 파산을 막을 수는 없었다. 결국 베어스턴스는 JP모건에 겨우 2억 3천6백만 달러에 팔렸다. 장부 가치로 2백억 달러까지 나갔던 것에 비하면 고작 1퍼센트의 가격에 팔린 것이다.

그러나 이런 파산 위험은 단지 베어스턴스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과 유럽의 많은 은행들도 베어스턴스와 마찬가지로 차입금으로 국내나 모기지 채권 등에 투자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2, 제3의 베어스턴스”가 나올 수 있다며 전 세계 금융시장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게다가 기업들이 모두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채권·주식 등을 매각하면서 자산 가치가 더욱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기준금리와 재할인율을 다시 0.75퍼센트 포인트씩 낮춰 값싼 신용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베어스턴스 파산에서 알 수 있듯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로 시작된 신용 경색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를 비롯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적극 개입한다면 신용 붕괴를 가까스로 막을 수는 있겠지만 만신창이가 된 실물 경제까지 회복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또, 이번 베어스턴스 인수 과정은 세계 지배자들이 주장해 온 신자유주의 교의가 말뿐이었음을 보여 줬다.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라’는 자유시장주의와 달리 미국 정부는 시장에 적극 개입했다. 미국 재무부가 나서 JP모건에 베어스턴스를 떠맡기다시피 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JP모건에 3백억 달러를 직접 대출해 주며 베어스턴스 인수를 도왔다.

떠넘기기

한편, 미국에서 위기가 심화하자 한국 경제의 앞날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경제 성장을 장담하던 이명박마저 “세계 위기가 시작된다는 생각도 든다”며 안절부절못하고 있다.

특히 미국 금융회사들이 현금 확보를 위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38조 원이 넘는 돈을 한국 주식에서 회수하고 3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면서, 전 세계적인 달러 약세 속에서도 원화는 더욱 하락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물가 상승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명박은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선전이 무색하게, “50개 생활필수품 물가를 집중 관리하라”고 지시하며 포괄적 물가 통제 정책이라도 취할 것처럼 말했다.

그러나 이런 말과 달리 이명박 정부의 실제 정책은 물가를 끌어올리는 효과만 내고 있다.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는 “원화가 고평가돼 있었다”며 원화 가치 하락을 용인했는데,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반도체나 자동차 등을 수출하는 주요 재벌 기업들은 더 큰 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면 석유·곡물 등의 수입 가격이 높아져 물가는 더 치솟을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서민이 져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부자·재벌의 세금은 깎아주고, 임금 인상 억제와 고용유연화 등으로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서민에게 떠넘기려 한다.

그러나 노동자·서민은 경제 위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체제의 위기를 부자·기업이 책임지도록 요구하며 싸워야 한다.

3월 28일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행진하자

정병호

매년 물가인상률의 2~5배 가량 인상된 등록금이 이제 사립대 한 해 평균 7백만 원에 육박하고 있다. 심지어 1천만 원이 넘는 대학도 부지기수로 생겨나고 있다.

평균 월 1백20만 원을 버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년 수입의 절반 가량을 자녀 등록금에 쏟아 부어야 한다. 돈이 없는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그래도 부족한 경우 학자금 대출에 의지해야만 한다.

벌써 30퍼센트의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이들 중 17퍼센트가 대출금 연체를 경험했고, 4천명 가량의 대학생들이 신용불량 상태에 놓이게 됐다. '88만원 세대'는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이라는 불안한 미래조차 대출금에 저당 잡힌 세대가 되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의 사립대학들은 이런 현실에 아랑곳 않고 등록금을 매년 수십만 원씩 올리고 있다. 인상이 불가피해서가 아니다. 상당수 사립대학들은 학교마다 수백억~수천억 원 가량의 이월적립금

을 쌓아 놓고도, 학생과 학부모의 회생을 대가로 배를 불리고 있다.

매년 학생들의 등록금 투쟁이 계속됐지만, 사립대학들은 쉽게 양보하지 않고 서로 답합해 높은 인상률을 유지해 왔다. 아예 터무니없는 인상을 제시한 후 양보하는 제스처를 취하며 10퍼센트 내외의 높은 인상률을 고수하는 꼼수도 부리고 있다.

이런 사립대학들의 전횡에 대한 광범한 분노와 공감대가 등록금 인상 규제 요구로 표현되고 있다.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통한 등록금 인하, 후불제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립대학 재단들의 전횡을 막기 위해 마땅히 필요한 정책들이다.

그러나 이런 정책을 정부가 순순히 받아들일까? 역대 정권들은 등록금 인상의 공범 노릇을 해왔다. 정권마다 교육재정 확충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졌고, 심지어 국립대조차 '자율화'라는 미명하에 등록금 인상을 부추겨 왔다.

이명박은 '대학 자율화'를 추구

하며 이런 추세를 훨씬 가속화할 것이다. 따라서 학생과 노동자 투쟁의 힘으로 정부가 등록금 인상을 규제하고 교육재정을 확충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3월 28일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와 5백30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등록금대책을위한시민사회단체전국네트워크(이하 등록금넷)'는 등록금 문제 완전 해결과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수천 명이 참가하는 이 행진에 다 함께 참가하자!

등록금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등록금넷에서는 등록금 문제에 대한 상이한 해결책들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인상을 상한제, 차등 책정제, 후불제, 상한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인상을 상한제는 물가인상률의 2~5배 정도로 등록금이 지나치게 인상되는 것을 규제하자는 방안이다. 당장 높은 인상률이라도 막아보자는 취지이지만 현실은 인상을

상한제로 만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등록금의 절대적인 액수가 너무 높다는 데에 주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등록금 동결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교수노조가 주되게 강조하고 있는 후불제 또한 공감은 가지지만 등록금 인하와 결합되지 않는다면 미흡하기는 마찬가지다. 당장의

부담은 면해도 미래에 짊어질 부담은 매한가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합리적 방안은 등록금 상한제다. 대표적으로 민주노동당은 한 해 등록금이 노동자 가정의 한 달 치 평균 소득 수준(약 3백만 원)을 넘지 않게 규제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안은 실질적 의미의 '반값 등록금' 안이다. 이 안이 실

현된다면, 노동자 가정에서 등록금 마련을 위해 몇 달 치 월급을 쏟아 부어야 하는 부담은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등록금 상한제를 주된 요구로 내걸고, 소득에 따라 차등 책정하는 차등 책정제와 후불제를 결합시키는 것이 가장 나은 방안인 듯하다. 그럼에도 8백6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일 년 등록금 3백만 원도 여전히 부담일 것이다. 따라서 등록금 상한제는 민주노동당의 주장처럼 교육재정 확충을 통한 무상교육 정책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

비판하는 발언들이 이어졌다.

한 학생이 "2차, 3차, 4차 행동까지 이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발언하자 뜨거운 지지의 함성이 쏟아졌다. 1천 명이 넘는 학생들의 분노와 사기는 학교 당국에 강력한 압력으로 작용했다. 결국 등록금 책정을 재논의하자는 학교 당국의 학생총회 참가를 호소했다.

결국 1천3백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총회가 성사됐다. 총회가 끝나고 학생들은 본관으로 가 향의했다. 학생들은 1층부터 3층까지 가득 메웠다. 대열 속에서 부당한 등록금 인상과 학생들을 무시하는 학교 당국의 태도를

이석민



2월 2일 등록금 인상 반대 집회

등록금 투쟁,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지난 몇 년간 등록금 투쟁은 꾸준히 확대돼 왔다. 많은 대학에서 수백 명 이상 참가하는 행동이 벌어지고, 심지어 1천 명 이상 참가하는 학생총회가 빈번히 성사되기도 했다. 올해도 벌써 단국대와 경희대 수원캠퍼스에서 학생총회가 성사되는 등 투쟁이 활발히 벌어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

게다가 2000년대 초반까지도 단지 개별 대학 내에서의 투쟁에 머물러 왔던 투쟁이 2~3년 전부터 대학 간 연대를 통한 대정부 투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사립대학들의 담합 때문에 재단이 한 대학 차원에서 쉽게 양보하지 않는데다, 등록금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열망이 커지면서 지난 몇 년 동안 학교의 장벽을 넘는 공동행동이 꾸준히 성장해 온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가 등록금 투쟁의 상징적 연대체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도 성과였다.

올해 등록금 투쟁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있다. 등록금 인상은 단지 학생들뿐만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학생들의 정성으로만 여겨져 왔던 등록금 투쟁에 올해 들어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등 광범한 피억압 대중 단체들의 참가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 단체들이 발의하여 결성된 등록금넷에는 현재 5백3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가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등록금 투쟁을 3월 '개마루 투쟁'으로 멈출 것이 아니라, 3월 28일 공동행동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이 성과를 학생들과 피억압 대중이 동참하는 지속적인 대정부 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지속적 투쟁을 위해서는 등록금 투쟁의 상징적 연대체인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와 등록금넷을 확대·강화해야 한다. 3·28 공동행동 건설의 성과를 바탕으로 가능한 곳에서는 지역과 개별 대학 차원의 연대체를 건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투쟁을 개별 대학 재단에 맞선 투쟁 — 학생총회, 점거농성, 수업거부 등 — 과 결합시킨다면 등록금 투쟁은 더한층 발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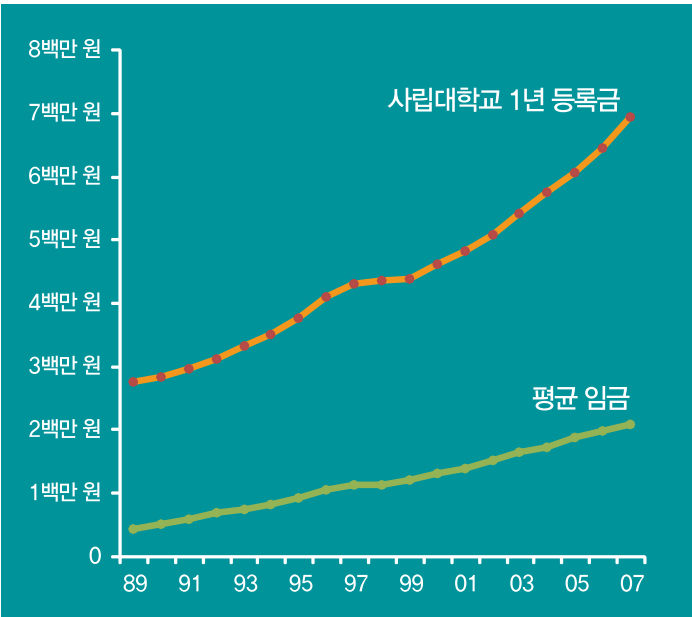
88만 원 세대에게서 듣는다

“아빠 월급은 그대로인데 등록금은 왜 그리 높을까요?”

대학 등록금 1천만 원 시대, 대학생들은 '학생인지 알바생인지 헷갈리는' 생활을 하며 청춘을 압류당하고 있다. 스타벅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 최윤영 씨를 만나 등록금과 아르바이트에 쫓기는 버거운 삶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윤영 씨는 한 사립대 법대 05학번이다.

“전 입학할 때부터 계속 알바를 했어요. 과외는 정말 많이 했고, 영화판 알바도 했는데 그건 진짜 힘들었어요. 주말 티켓 판매를 했는데 손님은 끝없이 오고 8~9시간 일하면서 20분 동안 밥 먹고 다시 와서 일해야 했어요. 계산을 하다 보면 천 원, 이천 원이 비는데 그것도 저보고 메우라고 했어요. 계속 서 있어서 그런지 배도 되게 아프고 너무 힘들었어요.

“스타벅스는 한 3개월쯤 됐죠. 일 자체는 덜 힘들는데 계속 서서 하는 거니까 다리나 등 이런 데가 좀 아파요. [영업]마감[시간]이 특히 힘든데 개강하고 나서는 계속 마감만 했어요. 집에 들어가면 12시, 12시 반? 그 다음날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영화판 알바할 때보다는 훨씬 나아요.”



갈수록 벌어지는 평균임금과 등록금 격차

“‘기회의 평등’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일하고 남는 시간에 집중하기도 힘들고 마음 속으로는 계속 불안하잖아요. ‘아, 책을 사려면 돈이 없는데’ 이런 생각하고, 로스를 생기면 더 심해지겠죠. 돈이 없으면 아예 시작을 못하니까.”

살인적인 등록금은 시험 부담 못지 않은 압박이다. 윤영 씨는 등록금 얘기가 나오자 목소리를 높였다.

“등록금을 세 번은 부모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지난번하고 이번에는 학자금 대출을 받았어요. 지금도 이자가 나가는 데 문제가 뭐냐면 누적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받으니까 처음 받은 거에 더해져서 돈이 엄청 커졌는데 다음, 다다음 학기도 장학금을 못 받으면 또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이 내 주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교수님이 ‘등록금 비싸서 못 내겠으면 다른 학교 가서 장학금 받고 다녀라’ 하셨는데, 돈 없는 애들은 좋은 학교 오지 마라는 얘기가 많아요. 전 장학금[제도]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만 주는데 알바하면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고 ...”

등록금이 비싼 만큼 교육이 만족스러운 것도 아니다. “제가 원하는 과목을 못 듣는 거나 대형강의가 많은 것도 그렇고 등록금은 엄청 뛰는데 교육 여건은 전혀 나아진 게 없어요.”

“처음엔 ‘아, 대학 가면 선배들하고 뭔가 사회문제에 대해서 얘기고 되게 진지해질 것이다’ 이랬어요. 근데 1학년 때부터 한눈 팔면 안 된다는 압력에 저희 반에는 중앙 동아리 같은 거 든 애들도 없어요. 집이 여유가 있으면 고시 준비가 아니라 다른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제가 이중전공하는 정치외교학과 수업은 4분의 1 정도가 영어강의예요. 좀 어이없죠. 이따기 사학과 수업도 영어로 할 거냐 말이에요. 대학은 이미 학문의 전당이 아닌 것 같아요. 기업 맞춤형 재를 키우는 곳으로 스스로 만들고 있어요.”

높은 등록금, 학자금 대출, 대학의 ‘취업학원화’ ... 단지 최윤영 씨만이 겪는 일은 아니다. 바로 이 나라 대학의 현주소다. 여기에 이명박의 노골적인 교육 시장화 정책은 학생들을 더 낭떠러지로 내몰 것이다. 이에 도전하는 학생과 노동자들의 투쟁이 필요하다.

인터뷰·정리 승주

단국대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학생총회가 성사되다



3월 13일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에서 부당한 등록금 인상에 항의하는 학생총회가 열렸다. ‘발진적’ 이전이라는 약속과 달리 캠퍼스 이전 뒤 오려 줄어든 학생자치공간과 복지, 등록금 고액인상과 3년제 신입생 차등 인상, 전입금 한 톨 없는 재단의 비리는 학생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단과대 학생회들은 방학 때부터 영상과 유인물을 제작해 신입생들에게 부당한 등록금 인상과 학교측

의 비리를 알리며 총회를 준비했다. 개강 이후에도 대자보와 팸플릿과 대형 걸개를 내걸었고, 적극적으로 강의실과 동아리 방을 돌며 학생총회 참가를 호소했다.

결국 1천3백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총회가 성사됐다. 총회가 끝나고 학생들은 본관으로 가 향의했다. 학생들은 1층부터 3층까지 가득 메웠다. 대열 속에서 부당한 등록금 인상과 학생들을 무시하는 학교 당국의 태도를

심각해지는 미국의 이란 위협

만약 모든 반전 활동가들이 미국의 이란 공격 가능성을 판단하는 측정기를 가지고 있다면 지난주에 이 측정기의 눈금이 급상승했을 것이다.

지난주 미국 중부사령관 윌리엄 팔론이 사임했다. 미국이 제국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미국의 통합 전투사령부를 보라고 권하고 싶다.

미국 국방부는 북미와 남미 대륙,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서아시아 지역을 포괄하는 6개의 통합 전투사령부를 가지고 있다. 중동에서부터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을 포괄하는 서아시아 지역이 중부사령부의 관할구역이다.

이 통합 사령부들의 지휘관들은 단순히 군사 작전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일개 대사는 범접할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정치 실세들이다. 지난해 11월 팔론은 파키스탄 대통령 페르베즈 무샤라프가 계엄령을 선포하기 하루 전에 그를 만나 계엄령 선포를 허가했다.

2007년 1월 중부사령부에 부임하기 전에 팔론은 태평양 통합사령부 지휘관이었다. 태평양 통합사령부에 근무하는 동안 그는 중국 군사 지도자들과 직접적 관계를 맺었고, 팔론 사임의 계기가 된 《에스콰이어》의 기사를 보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힘을 인정받고 싶다면, 그런 힘에 따른 책임감도 받아들여야 한다.”

팔론은 《에스콰이어》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에 대해서도 동일한 전략을 적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것은 조지 부시와 딕 체니의 임기가 내년 1월에 종료되기 전에 이란을 공격하고 싶은 네오콘 핵심 인물과 다른 우익 인사들과 충돌을 낳을 수밖에 없는 주장이었다.

팔론은 미국 국방 기구 내에서 반란을 선동해 그런 공격을 잠시 중단시킬 수 있었다. 그는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미

국 정부의 매파를 공격했다. “이런 공격 위협은 전혀 유용하지 않다. 나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 기대하며, 그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앙적

군사 전문가들은 [이란에 대한] 공중 폭격이 효과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이란의 보복을 초래해 상황이 급속히 악화될

지난 3월 4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윌리엄 팔론 – 부시와 네오콘은 이란 공격의 ‘걸림돌’ 중 하나를 제거했다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 이란 전문가는 〈파이낸셜 타임스〉에 이렇게 말했다. “군장교들은 미국 정부가 제한적 공습을 생각하고 있더라도 적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고 지적한다.”

2007년 12월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미국 정보기관들이 이란이 2003년 이후 핵무기 개발 계획을 폐기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것이다.

팔론은 이라크 사령관이자 미군 증파 계획을 입안한 데이비드 페트라우스와도

충돌했다. 팔론은 미군이 이라크에 발목이 잡혀서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에스콰이어》에 “5~6개의 주전자에 끓고 있는 지역에서 우리 나라가 한 가지 문제에만 몰두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2주 전에 《에스콰이어》는 팔론을 “전략적으로 옳지 않은 전쟁을 벌이려는 최고사령관[대통령]에 맞서 일어난 사람”이라고 아첨을 떨면서 소개했는데, 이 때문에 팔론은 사임해야 했다.

부시는 자신이 팔론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미국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는 팔론의 사임이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또, 게이츠는 만약 팔론이 자기 자리에서 일찍 떠난다면 “그것은 대통령과 부통령이 올해 말 이란 공격을 벌일 생각이며, 자신들의 계획을 방해하는 사령관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는 《에스콰이어》의 주장을 “어처구니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어처구니없는 주장일까? 브래드포드 대학 평화학 연구소의 폴 로저스는 팔론의 사임에 대해 논평하면서, 만약 미국 정부가 올해 가을 이란과 전쟁을 벌인다면 초강경 매파 후보인 존 맥케인 공화당 대통령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로저스는 팔레스타인 가자와 레바논에서 저항 세력 제거에 실패하고 있고 이란의 국제적 영향력 증대를 우려하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라크 침략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난 지금, 미국 정부의 이란 공격 가능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반전 운동은 중동에서 다시 한번 재앙적 전쟁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3·16 국제공동반전행동

젊고 활기찬 반전 시위 – 반이명박 투쟁의 첫걸음을 떼다

김광일

3·16 국제공동반전행동 서울 집회에 1천여 명이 참가해 부시의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점령 종식과 한국군 철군을 요구했다.

미국의 이라크 점령이 5년이나 됐는데도 반전 운동은 여전히 굳건한 대열을 보여줬다.

다수가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이었던 반전 시위 대열은 ‘킹스턴 루디스카’의 콘서트에서 집회와 행진까지 시종일관 열정과 활력으로 넘쳤다. 이랜드 조합원과 아주대병원 노조를 비롯한 노동조합원들의 참가도 인상적이었다. 〈통일뉴스〉는 활기찬 분위기 때문에 이날 집회를 “축제”라고 보도했다.

연사들과 집회 참가자들은 5년째에

3·16 국제공동반전행동 서울 집회

접어든 이라크 점령의 종식과 철군을 요구했고, 상시파병법을 추진하고 한미 전쟁동맹을 강화하려는 친미 불도저 이명

박에 맞서 강력하게 싸울 것을 결의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집회 결의문에서 “무고한 민중의 평화를 짓밟고 전쟁에 동조하는 이명박 정권은 민중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전 운동이 반이명박 투쟁의 포문을 연 것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팔레스타인 깃발로 연대를 표하고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봉쇄와 학살을 규탄하는 팻말 등으로 이스라엘의 점령과 학살이 미국 제국주의 프로젝트의 일부를 분명히 했다.

한편, 3월 15일 부산에서도 2백여 명이 참가한 반전 집회가 열렸다. 부산민중연대, 평화재향군인회 부산본부, 다함께 부산지회 등이 공동 주최한 집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참가했다. 경찰은 하루 전날 차도 행진을 불허하는 “조건 통보”를 내렸

지만, 시위 대열은 성공적으로 행진했다.

국제 반전 운동의 저항도 계속되고 있다. 미국 LA 시위에 1만 명이 참가한 것을 비롯해, 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참전 군인들이 워싱턴에서 점령의 진실을 알리며, 점령 종식을 요구하는 행사를 하고 있다.

3월 15일 런던에서는 4만 명이 반전 시위를 벌였다. 국제 시위 웹사이트(<http://theworldagainstwar.org>)를 보면 지난 주말에 40여 개 도시에서 시위가 열렸다.

점령과 ‘테러와의 전쟁’이 낳은 세계적 불안정이 계속되고 또 다른 전쟁의 위협이 생겨나고 있는 지금, 반전 운동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한국의 반전 운동은 친미 불도저 이명박에 맞선 투쟁의 중요한 고리가 될 수 있다.

“대운하 건설은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가져올 것”



.....
 지난 3월 17일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대 교수 모임'의 공동대표인 김정욱 환경대학원 교수를 만나 대운하 건설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들었다. 이 날 김교수는 비슷한 내용으로 한반도 대운하 연속 공개강좌를 하기도 했다.

대운하 건설에 반대하는 서울대 교수 모임에 많은 교수님들이 참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모임이 시작됐는지요.

교수님들 중에 한반도 운하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이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준구 교수님이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고 내가 신문에 칼럼을 쓴 것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교수들이 한번 입을 모아 보자고 이야기를 꺼냈더니 순식간에 많은 교수님들이 모여서 결성됐습니다.

대운하 건설 계획에 반대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운하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좀 다르겠지만 저는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는 데 반대합니다.

강이라는 것은 이리 구불 저리 구불 흘러 물살이 빠른 데와 느린 데가 생기고 따라서 침식되는 곳과 퇴적지가 생기고, 그에 따라 수심이 깊은 웅덩이와 얕은 여울이 생깁니다. 이런 물길을 흐르면서 에너지가 분산돼 홍수의 파괴력을 줄이기도 하죠. 유속의 차이 때문에 돌과 모래와 자갈, 그리고 미세한 입자의 펄이 깔린 곳과 수초가 자라는 곳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벌레에서 물고기까지 모든 수중 생물들이 거기서 제각기 먹이를 찾고 산란할 장소를 찾고 물을 맑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운하는 강을 직선으로 만들고 깊은 웅덩이로 만들어 물이 흐르지도 못하게 채워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수중생물들이 죽고 물은 썩고 홍수 범람을 일으켜 사람도 죽습니다.

우선 홍수 문제를 보면 독일 운하 예를 많이 드는데 독일의 강과 우리 나라의 강은 다릅니다. 라인강의 하상계수(연중 최대유량/최소유량)는 14밖에 안 되는데

낙동강의 하상계수는 3백72이고 한강의 하상계수는 3백93입니다. 여름에 집중 호우가 내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기후변화 때문에 1백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비가 해마다 내리고 있는데, 이런 국지성 호우가 토막 난 각 수로를 범람시켜 홍수 피해를 가중시킬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 대부분의 곡창이 하천변 저지대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는 식량위기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홍수가 오기 전에 물을 미리 빼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를 미리 알려 줄 만큼 용한 예언가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 오염 때문에 우리에게 큰 경제적 손실을 줍니다. 운하는 사실상 물이 고여 있는 상태라서 물이 쉽게 오염되고 회복이 어렵습니다. 이런 물이 상수원에 흘러들면 먹는 물이 오염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취수지를 이전해야 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장기적으로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그런 사업입니다. 플로리다 운하의 예가 이를 잘 보여 줍니다.

플로리다는 1920년대에 반도의 구석 구석을 다 운하로 연결하느라 구불구불한 강들을 전부 직강화했습니다. 강 길이를 거의 절반으로 줄이고 수심을 10미터 이상 유지하려고 강바닥을 파고 댐과 갑문을 설치해 전기로 수문을 열어야만 물이 흐르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1928년에 이 공사가 완공되자마자 홍수로 2천여 명이 죽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운하에는 물을 항상 채워 놓아야 하기 때문에 홍수에 취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플로리다 운하는 6미터 높이의 둑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뒤로도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부영양화(수중생태계의 영양물질이 증가해 조류가 급속히 증가하는 현상)

하상계수(최대유량/최소유량)이 1백99인 미시시피강 세인트 루이스의 홍수방지 둑은 높이가 18미터다. 단순 계산으로 하상계수가 3백72인 낙동강은 무려 56미터가 넘는 홍수방지 둑을 쌓아야 한다

가 일어나면서 물이 갈색으로 변해 버렸는데 이 물들이 지하수로 스며들어 거의 모든 운하지역의 지표수와 지하수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수중생물들이 사라지면서 물새들이 사라졌고 강과 육지 사이에 단절이 일어나면서 식생에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토양이 유실돼 지금까지 거의 1.5미터 두께의 흙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추세로 앞으로 20~30년 더 토양이 유실되면 토양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플로리다 운하에서는 하천 복원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강인 키시미 강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키시미 강을 운하로 만드는 데에는 3천만 달러가 들었지만 복원공사에는 10배인 3억 달러가 들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정부 계획에서는 필요한 공사비가 많이 빠졌습니 다. 상수취수원 이전 비용, 댐의 높이만큼 강변에도 죽 쌓아야 할 하천제방 건설비, 암반하상 굴착비, 높이와 교각 사이의 거리가 맞지 않아 새로 건설해야 할 교량개축비, 수몰민 이주대책비 등을 빼 놓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모래인 골재를 팔아서 8조 원 이상을 충당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연간 모래시장의 규모가 1조 원 밖에 안 됩니다. 이 돈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유럽에도 섬나라나 반도 국가들은 다 운하 물동량이 제로인데 삼면이 바다인 우리 나라에서 물동량도 없는 운하를 만들겠다는 것은 낭비입니다.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 외에도 그나마 일자리라도 생기면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정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기왕 돈 써서 일자리를 만드는 거라면 다른 것을 해야 합니다. 건설 산업으로 생기는 일자리는 고작해야 건설 기간 동안에만 생기는 일자리입니다. 따라서 같은

돈을 들이는 것이라면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 지식기반 산업이나 첨단 산업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시도해야죠.

이명박 정부는 운하로 온난화를 막는다는 얘기도 합니다. 운하로 도로수송 물량을 이전시킬 수만 있다면 시장 경제 논리에 따른 효율은 좀 떨어지더라도 온난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운하를 하더라도 어차피 도로 물동량은 그대로 남아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경부 운하가 만들어져도 강이 끝나는 자리에서 최종 목적지까지는 도로 교통이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운하를 다니는 배들 자체가 엄청난 오염원이거든요. 배들이라는 게 아주 저질의 연료를 쓰고 엔진도 그렇게 좋은 엔진이 아니에요.

그리고 운하를 만들면서 생각지도 못한 데서 온실가스가 많이 나와요. 퇴적물을 파낸다는 건 식생을 망가뜨리는 과정에서 오히려 오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도로 교통에 비해 경제적으로 대단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물동량도 없었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운하를 통한 교통은 철도에 비해 훨씬 많은 온실가스를 뿜어냅니다.

앞으로 서울대 교수 모임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자료 만들어 내고 공개강좌를 계속 할 겁니다. 책도 낼 계획인데 우선 만화책을 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 교수님들도 참여해서 전국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한반도 대운하가 우리나라 앞날에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이 계획이 추진되지 않도록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 정리 장호중

‘다함께’의 기본 입장

노동계급의 자기해방

자본주의는 착취, 억압, 빈곤, 환경파괴, 전쟁 등을 낳는다.

이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이 사회의 부를 만드는 데도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부를 집단적으로 통제하고, 이윤이 아닌 인간의 필요에 따라 부의 생산과 분배를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사회를 위해 싸운다.

오직 노동자들 자신의 대중 투쟁으로써만 자본주의 착취·억압 체제를 없애고 그러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이뤄지는 점진적 개혁들은 착취와 억압을 끝장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기관들은 중립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억압자들의 투쟁으로부터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노동계급에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국제주의

노동자들은 국제적인 계급이고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은 국제적인 투쟁이다.

우리는 노동자들 사이의 민족적 분리를 극복하고 국제적인 노동계급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지지한다.

우리는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 맞서게 만드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북한 난민과 이주 노동자의 이주 규제에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세계 지배와 그들의 전쟁에 반대하고, 제국주의 지배에 맞서는 피억압 민족의 민족해방 운동을 지지한다.

근본적 사회변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안 되고 국제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옛 소련과 동유럽처럼 북한과 중국과 쿠바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 나라들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비민주적 사회이다.

우리는 그 곳 노동자들이 지배 관료에 맞서 벌이는 투쟁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민중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은 국제 변혁의 일환으로서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자본주의 하에서는 여성 차별, 인종 차별, 동성애자 차별 등과 같은 특정한 형태의 억압을 당하는 사회집단들이 있다. 이러한 억압들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노동자 연대를 약화시키는 데 이용된다.

모든 형태의 억압에 반대해 민주적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은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한편, 근본적 사회변혁 없이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여성,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그밖에 영세노동상과 철거민과 빈민 등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한다.

현장조합원 운동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의 역할은 자본주의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노조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로부터 독립한 현장조합원 대중 행동을 건설한다.

변혁 정치조직

노동자들이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려면, 가장 전투적인 노동자들이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지지자들은 노동자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대중조직 속에서 활동함으로써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수 있다.

우리는 개량주의 지도자와 개량주의 사상이 피억압 대중의 이익에 어긋남을 실천에서 입증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하는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독자편지

letter@counterfire.or.kr 3월 24일(월)까지 독자편지를 보내 주십시오

가족관계등록법은 호주제 아류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법을 대체한 새로운 신분등록제(‘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 2008년 1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원칙이 반영”됐다는 대법원의 홍보와 달리, 가족관계등록법은 시행되자마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개인의 비밀과 프라이버시가 전혀 보호되지 않는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사용 목적별로 5종의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개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로 나뉘어 발급되는데, 여기에 드러나는 정보가 호적과 거의 차이가 없다.

두 아이를 입양한 한 여성은 아들의 기본증명서에 ‘버려진 아이’였다는 사실이 기록돼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일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 관계가 기록돼 입양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또, 친권이나 양육권이 없어도 결혼 전에 낳은 아이나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까지 기재된다.

혼인관계증명서에는 과거 혼인경력도 기재된다.

아버지 성을 따라야 하는 원칙도 여전하다. 물론 혼인신고 시 부부가 협의했을 때는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르거나 재혼한 아버지의 성을 따르려면, 재판을 청구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배우 최진실이 법원에 낸 자녀 성 변경 신청이 1차 기각된 데서 보듯이, 법원의 판결은 보수적인 편이다.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자녀의 성을 변경한 경우에도 재혼한 남편이 아내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에 친부가 기재된다.

성평등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 해소, 정보인권 보호라는 원칙에 기초한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요구했던 사회운동단체들(‘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 공동행동’)이 지적했듯이, 가족관계등록법이 호주제 아류에 불과하다는 점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이나라

영화 〈4개월 3주 … 그리고 2일〉을 보고

여성의 날 1백 주년을 맞고, 낙태 합법화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요즘 눈길을 끄는 영화가 있다. 〈4개월 3주 … 그리고 2일〉은 차우세스쿠 독재정권이 낙태를 불법화한 루마니아에서 은밀히 낙태를 하려는 가비타와 이것을 돕는 친구 오티리아에 대한 이야기다. 이 영화는 낙태에 대한 여성들의 심리를 불편할 정도로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다.

낙태 시술자는 둘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악질적인 요구를 하지만, 가비타와 오티리아는 시술 장소인 호텔을 빌리기도 돈을 마련하기도 어렵다. 세상은 가혹하게 차가운데 가비타의 남



자 친구는 그림자도 비치지 않는다. 카메라는 숨막힐 만큼 불안한 오티

리아의 심리를 끈질기게 쫓아간다. ‘왜 오티리아는 처절하게 희생하며 가비타를 돕는 걸까?’ 하는 의문은 오티리아가 자기 남자 친구에게 자신이 임신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추궁하고, “적어도 가비타는 날 도와주겠지” 하고 말하는 모습에서 쉽게 풀리고 만다.

1960~1980년대 루마니아에서는 불법 낙태시술로 여성 50만 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공식적으로는 낙태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다.

낙태에 대한 사회적 해결이 절실한 오늘날도 또 다른 가비타와 오티리아가 비밀리에 병원을 찾고 있을 것이다.

박조은미

지역 사회 포럼

서울 남부지역 사회포럼

티베트인은 왜 저항하는가

일시: 3월 24일(월) 오후 8시

연사: 텐진(한국 이름 민수, 티베트 출신 네팔인),

김용욱(〈맛볼〉 기자)

장소: 서초종합복지사회관 4층 3강의실(양재역

5번 출구에서 50미터)

참가비: 2천 원

문의: 010-2401-1987

대학 맑스주의 포럼

강원대

사회주의 — 좋은 사상,

그러나 가능한가?

일시: 3월 25일(화) 오후 6시 30분

장소: 인문대 3호관 122호

문의: 010-4150-5963

교대·중앙대

이명박 교육 정책 —

누구를 위한 ‘경쟁물입교육’인가?

일시: 3월 25일(화) 오후 6시 30분

연사: 강영만(고려대 출교생, 전국대학생교육대

책위 집행위원)

장소: 서울교대(추후 공지)

문의: 010-3163-1673

건국대·한양대

이명박 시대 —

역사는 과거로 회귀하는가?

일시: 3월 27일(목) 오후 6시 30분

연사: 전지윤(〈맛볼〉 공동 편집자, ‘다함께’ 운영

위원)

장소: 한양대 사범대 302호

문의: 010-6749-7949

북부통합

이명박 교육 정책 —

누구를 위한 ‘경쟁물입교육’인가?

일시: 3월 27일(목) 오후 6시 30분

연사: 박거용(한국대학교육연구소 소장, 상명대

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교수)

장소: 고려대(추후 공지)

문의: 011-9952-6288

한국외대·경희대·시립대

이명박 교육 정책 —

누구를 위한 ‘경쟁물입교육’인가?

일시: 3월 27일(목) 오후 6시 30분

연사: 하재근(학벌없는사회 사무처장)

장소: 한국외대 인문과학관 302호

문의: 011-9937-1755

청소년 포럼

21세기 여성 해방

일시: 3월 22일(토) 오후 2시

연사: 최미진(‘다함께’ 운영위원)

장소: 미자센터 다름방(충무로역 4번 출구)

문의: 010-6822-8692

민주 진영이 압승한 서울지하철 노조 선거

서울지하철노조의 선거는 민주 진영의 압승으로 끝났다.

위원장을 비롯해 4개 지부 지부장과 지회장 25명이 민주 진영에서 당선됐다. 조합원들은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과 노사협조를 우선해 온 [이른바 ‘배일도’ 노선] 집행부에 대한 반감 때문에, 민주 진영의 지도부를 선택한 것이다.

이번 선거는 아주 오랜만에 범민주 진영이 단일 후보를 내고 선거에 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유화와 구조조정에 맞서 범민주 진영이 공동으로 투쟁할 가능성

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지하철도 사유화와 이를 위한 구조조정의 칼날 앞에 놓여 있다. 서울시와 공사는 ‘창의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철저하게 배제한 채 자본가만을 위한 “실용” 정책들을 무수히 쏟아내고 있다. 서울시 산하 공기업들은 뚜렷한 근거도 없이 인원 20퍼센트를 감원하겠다는 계획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신임 지도부의 역할은 너무나 막중하다. 조직개편과 직제개편을 통한 분사화, 아웃소싱, 민간위탁, 외주용역 등을 시행하겠

다는 서울시와 공사의 도발을 막아내고, 축소된 지하철 노동자들의 복지도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또 그동안 단절된 민주노조 진영과 연대를 복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번 선거 결과는 이명박 정부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려 하는 사유화와 구조조정에 가만히 당하고 있지만은 않겠다는 지하철 노동자들의 정서를 보여 줬다.

노동자의 진정한 힘은 단결과 투쟁에서 나온다는 원칙에 충실한 집행부가 되기를 바란다.

노기호
(서울지하철 역무조합원)



민주노동당 당원이라는 이유로 해고된 성향아 씨

지노위 승소 판결을 받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민주노동당 활동을 이유로 계약해지된 뒤 3개월째 싸우고 있는 나는 3월 18일 서울지방법노동위원회에서 “민주노동당원이란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날 지노위 공익위원은 나에게 탈당을 전제로 사측과 화해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전쟁에 반대하고 비정규직 차별에 맞서 온 민주노동당원이라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 “당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권리”라고 당당히 말했다.

이번 판결로 공단이 나를 계약해지한 것 자체가 아무런 정당성도, 법적 근거도 없음이 분명해졌다.

물론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중앙노동위에 항소할 것이고, 만약 거기서도 지면, 그 다음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나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나는 이번 주부터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서명 용지가 놓인 가판을 차리고, 팻말을 들고 서 있는데 많은 동료들이 찾아와 격려해 줘서 큰 힘이 됐다. 주민들도 힘내라고 응원했다.

내가 이런 투쟁을 할 수 있기까지 많은 활동가들의 도움이 있었다. 이번 1인 시위에도 산업기술평가원 노조 활동가들과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동지구협회의 회 활동가가 함께했다.

나는 앞으로도 공공노조 서울본부 등과 협력하며, 장기 투쟁중인 노동자들의 순회 집회와 연대 투쟁에도 적극 참가할 생각이다.

성향아

승리의 본보기를 보여 준 만도 노동자들

금속노조 만도지부 노동자들이 투기 자본에 공장을 재매각하려는 사측에 맞서 고용안정과 매각차익 환원 등을 요구하며 투쟁한 끝에 통쾌하게 승리했다.

1997년 부도 후 만도를 인수한 투기자본 선세이지의 횡포 때문에 그동안 노동자들은 대량 해고와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려 왔다. 그런데 다시 투기자본 KKR로 매각이 추진되자 노동자들의 분노가 폭발했다.(맛불) 72호 관련기사 참조)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KKR의 인수는 좌절됐고, 한라그룹 정인영 일가가 다시 만도를 인수하게 됐다. 이번 매각으로 선세이지는 7천억 원이 넘는 차익을 남겼다.

그러나 투기자본과 경영진이 거둔 수익은 노동자의 희생과 공적자금 지원에서 나온 것이다. 1997년 만도기계 부도 당시 정부가 무려 3조 6천억 원의 공적자금을 쏟아 부었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됐다.

그래서 만도 노동자들은 매각 차익의 사회 환원과 노조·고용·단협 승계를 요구하며 투쟁을 계속했다.

노동자들은 부분파업에 이어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잔업·특근 거부, 상경투쟁 등을 지속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고용안정과 함께 2백만~7백50만 원의 매각특별격려금을 따냈다. 조합원 1인당 6백만 원 상당의 주식을 배정받았고, 노조·고용·단협 승계도 약속받았다.

만도 노동자들의 승리는 앞으로 예정된 공기업 사유화와 해외 매각 등에 맞서 벌어질 투쟁들의 좋은 본보기다.

정종남

정인열 코스콤비정규지부 부위원장 인터뷰

“이명박은 비정규직을 국민으로 보지 않아요”

이명박은 취임한 지 보름만에 코스콤 비정규직 농성장을 폭력 철거했다. 침탈 당시 폭행당해 병원에 실려 갔던 정인열 코스콤비정규지부 부위원장이 당시 상황을 전해 준다.

“새벽에 구청에서 고용한 용역 2백 50여 명과 코스콤이 고용한 용역 1백 명이 합세해 농성장을 철거했어요. 조합원들은 쇠사슬로 농성장에 몸을 감고 있었는데 다짜고짜 발과 주먹이 날아오기 시작했어요.

“천막 안에 계신 분들이 엄청 맛있어요. [안에는] 카메라가 없으니까 막 때려도 돼!” 이렇게 지시하더군요.

“두 명이 아직까지 병원에 있는데, 한 분은 코뼈가 부러지고 꼬리뼈가 심하게 상했어요. 다른 한 분은 머리와 얼굴을 집중적으로 맞아서 머리 통증이 굉장히 심하다고 말해요.

“경찰은 길목을 원천봉쇄해 연대 대오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조금이라도 항의하면 다 연행해’ 하고 지시하더군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저는 이명박이 비정규직을 국민으로 보지 않는구나 생각했어요.”

폭력 철거 직후 이명박 정부는 가증스럽게도 노동자들에게 철거비용 4천7백만 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코스콤 노동자들과 연대 동지들은 3월 19일 새벽 농성장 재설치에 성공했다! 사무금융연맹 위원장도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하며 연대하고 있다.

반면, 지난해 10월 한국노총에 가입한 코스콤 정규직 노조 지도부는 한국노총이 철거 구단 성명을 발표하자 한국노총을 항의 방문하는 어처구니없는 배신적 행태를 보였다.

정인열 동지는 “바리케이트를 확실히 치고 끝까지 투쟁해서 승리했으면 합니다” 하고 다짐했다.

인터뷰·정리 오정숙



《푸른 생명》
구속노동자 석방과 사면 물품?위한 공동행동 엮음
메이데이

추운 겨울밤의 고통과 침묵을 깨고 햇볕을 마주하던 날 나는 비로소 자유를 볼 수 있었다. 이랜드 투쟁 연대로 구속돼 있다가 지난 1월 성동구치소 옥담을 넘어서며 출소하던 날의 기억이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구속돼서 혹은 겨울을 빠져나와 따뜻한 봄의 길목을 만났을 때 반가운 책을 접했다. 바로 ‘구속노동자 석방과 사면을 위한 공동행동’이 구속노동자들의 편지를 묶어 모은 옥중서한집 《푸른 생명》이다.

쇠창살을 뚫고 들려 오는 생명의 노래

다소 묵직한 두께가 주는 부담은 책장을 넘겨 구속된 노동자들의 주옥 같은 글을 만나는 순간 이내 사라졌다. 화려하거나 유창하지는 않지만 그들은 노동자 ‘투쟁’의 언어들을 한 평 남짓 단절된 공간에서 처절한 몸부림으로 써내려 가고 있었다.

계급의 기억

팬으로 꺾꺾 눌러가며 절망의 공간에서 “희망과 연대”를 길어올리고 있다. 가슴 한 편이 뭉클해져 오면서 때로는 비장함이 느껴지는 노동해방 투사들의 전의가 육적 담장과 쇠창살을 뚫고 전해진다.

《푸른 생명》의 1부 ‘서정시가 어울리지 않는 시대’는 구속노동자들의 옥중시를 엮은 것이다. 2006년 여름 포스코 건설노동자들의 처절했던 투쟁을 생동감있게 펼쳐 낸 조선남(조기현 대구경북건설노조 위원장) 시인의 ‘형산강 다리, 해방의 다리를 건널 때까지’는 그 중 백미다. 나머지 시들에도 노동해방을 향한 그들의 굽힐 수 없는 신념과 의지, 투쟁의 기억들이 너무나 인간적으로 표현돼 있다.

아울러 2부 ‘겨울을 이겨낸 저 푸른 보리처럼’은 구속노동자들의 주옥 같은 편지들을 펼쳐내고 있다. 특히 2007년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군 뉴코아·이랜드 비정

규직 투사들의 이야기가 서신으로 생동감 있게 펼쳐지고 있다. 나는 너무나 인간적인 이 노동자들이야말로 역사 발전의 주체로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한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투사들의 편지를 읽다가 나는 어느새 긴 여독을 뚫고 ‘계급의 기억’과 소통하고 있었다. 또한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된 수많은 양심수와 이주노동자들의 글까지, 단번에 읽어 내려가기에는 아까운 소중한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있다. 이 푸르른 봄날 노동자 계급의 기억과 함께 해 보자. 진정 온몸으로 ‘푸른 생명’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조민호



법원의 고려대 퇴학 효력 정지와 복학 판결

“7백 일간의 투쟁과 연대가 일궈 낸 소중한 승리입니다”

강영만(복학하는 고려대 출교생)

3월 17일 서울지방법원은 우리가 제기한 퇴학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2007년 10월 4일 출교무효 판결, 2008년 1월 29일 출교효력정지 판결에 이어 세 번째로 우리의 학생 지위를 회복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학교 당국은 출교효력정지 판결 이후 그 취지를 무시하고 우리를 퇴학시켰지만 이제 더는 꾀수를 부리지 못할 것 같다. 학교 당국도 “일반 학생들과 차별없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학생처장, <뉴시스>)이며 “이달 안으로 모든 절차를 완료시키겠다”(학생처장, <고대신문>)고 했다.

또, 3월 20일 내로 등록 절차를 마무리하고 2년 전 출교 당시 납부했던 등록금도 모두 보전해 주기로 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학기부터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다.

결국, 우리는 완전히 승리했다!

법원은 “이 사건 감금행위 당시 피해 교수들은 ... 요구안을 단지 수렴만 하였다면 언제든 고려대학교 본관 건물을 떠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학은 ...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성숙된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이 필요했음에도, 고압적이고 관료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 [본관 시위]까지 이르게 했다”고 판결해 학교 당국에 일침을 가했다.

법원은, 학교 당국이 2년 동안 고집했

던 “반성”과 “사과”에 대해서도 “책임이 전적으로 신청인[출교생]들에게만 있는 것으로 대외적으로 각인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있고, 우리가 “양심과 신념에 따라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인정해 줬다. 학교 당국은 우리에게 더는 사과와 반성을 강요할 명분이 없어졌다.

그간 학교 당국은 학생운동이 강화될까 봐, 출교를 결정한 고대 보직교수들의 명예와 위신이 떨어질까 봐 법원 판결조차 무시하고 출교 입장을 고수해 왔다.

우리가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를 ‘두 번 출교’시키는 퇴학 꾀수도 부렸다. 퇴학이 나뉘고 심에 찬 결정이었다는 의미로 학교 당국이 법원에 제출한 상벌위원회 속기록은 이 징계가 얼마나 정치적인가를 드러냈을 뿐이다.

결국 “사람들이 출교는 너무하다고 생각했지만 퇴학은 다르다” 하고 자신감을 보였던 학교 당국은 쓰디쓴 패배를 맛봤다.

이제 학교 당국은 우리를 복학시키는 것은 물론 출교무효판결 항소 절차도 취하하고 퇴학징계 역시 완전히 철회해야 한다.

지난 3월 14일 퇴학 철회 변호사비 마련 후원주점은 지난 2년 동안 출교 철회 투쟁에 대한 지지와 연대가 얼마나 넓어졌는지 잘 보여 줬다.

학교 당국의 이간질 때문에 우리와 다소 소원했던 보건과학대 학생회장은 “저희들을 위해서 행동해 주신 분들인데 ... 이곳에 오는 데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

니다. 미안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길에 저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말해 우리 출교생들의 눈시울을 적셨다.

이명박 시대의 새로운 승리로 이어지길

또, 이랜드 일반노조 김경옥 위원장이 참가해 “고대 출교 동지들이 지난 2월 초 승리했다며 남은 농성기금을 털어서 저희들에게 주었습니다. 다시 퇴학됐다는 소식을 듣고 돌려주려 했으나 통장잔고가 비어 있었습니다. 너무 미안해서 모금을 조금 했습니다. 동지들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일 것입니다” 하고 말했다.

한 달에 7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최저임금으로 고통받는 고려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 조합원들이 모금에 동참해 1백27만 원이나 되는 돈을 전달해 주셨다. 이날 주점은 출교 철회 투쟁이 아름다운 노동자·학생 연대를 건설했음을 보여 줬다.

심지어 연대 후원 주점 장소를 대여해 준 교우회관 식당업체 관계자도 교우회와 학교 당국의 행사 불허·취소 압력을 거부하고 우리에게 후원금까지 줬다.

학교 당국의 복학 사기극과 퇴학 결정 이후 전국교수노동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전국의 대학 학생회들, 그리고 잘 모르는 이름으로 들어온 변

호사비 마련 후원금과 주점 수익까지 합쳐서 총 8백만 원이나 모였다.

학생들은 법원 판결 소식에 “이번엔 확실하겠죠?”라며 불안해 하면서도 “제 일처럼 기뻐요!”라며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학내 거리에서 나눠 준 1천5백 장의 리플렛이 1시간여 만에 동이 날 정도였고 리플렛을 받은 학생들이 곳곳에서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며 축하해 주었다.

임종인 국회의원은 “새 역사를 쓰는 자네들을 존경하네” 하는 메시지를 보내 왔다. 홍세화 씨는 우리의 복학이 확정된 18일, 강연 일정으로 고려대를 찾았다가 천막농성장을 방문해 너무나 기뻐했다.

김성환 삼성일반노동조합 위원장과 김갑수 삼성해북투위원은 기쁨에 찬 목소리로 “정말 고생 많았다. 삼성에 맞선 투쟁이 승리를 거뒀다”고 우리를 격려해 주었다.

출교 철회, 퇴학효력정지, 복학으로 이어진 우리의 승리는 지난 2년 동안 지속된 수많은 학생들, 교수님들, 시민들의 연대 덕분이다.

7백 일간의 출교 철회 투쟁은 학내뿐 아니라 범사회적으로 강력하고 아름다운 연대를 건설했고 학교 당국을 고립·분열시켰다. 끈질기고 광범한 운동은 이명박 시대에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 줬다.

우리의 승리가 전체 노동자·학생 운동을 고무하고 새로운 승리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란다.



등록금 동결! 등록금 상한제 실현!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규탄!
3·28 전국 대학생 행동의 날
일시: 3월 28일(금) 3시 / 장소: 서울 도심(추후 공지)

주최: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

등록금 문제 완전 해결과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국민대행진
2008 등록금 완전정복
일시: 3월 28일(금) 4시 / 장소: 서울 도심(추후 공지)

주최: 등록금대책을위한시민사회단체전국네트워크